

# 영유아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부모의 실제 체감도를 높여야

우남희 소장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저출산 대책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지원 대상과 규모는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다”며 2012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국가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는 3, 4세 유아까지 확대하는 등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해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정부는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수준의 육아지원 확대는 보편적 양육지원체계로서 비용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분명하였다.

이와 같은 영유아에 대한 양육과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에도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비 경감에 대한 체감은 낮은 상황이다. 이는 국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책임지고 최소한의 양육비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영유아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다른 각종 육아물품이나 사교육 등에 대한 지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명을 낳아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들어가는 양육비용이 3억원이라고 한다. 당장 초중고의 학원비나, 대학이후의 여학연수, 결혼비용 등은 제외하더라도, 취학 전 영유아에게 필요한 산후조리원, 유모차, 기저귀, 분유, 장난감, 의료비, 의류비

등 아이를 뒷바라지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의 규모는 상당하다.

또 하나는 아마도 사회 변화에 따른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자녀를 위해서는 다른 비용은 다 줄이더라도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나 양육비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사회가 다변화되고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져 자녀양육이 '양'에서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모하면서, 오히려 자녀수가 줄었음에도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돈이 없으면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 된지 이미 오래이고, 매년 치솟는 육아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녀는 돈과 맞물려 가계경제를 흔드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국가수준의 비용지원이 현 시대 부모들의 인식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는다면, 보편적 보육·교육이라는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가중됨은 물론이거니와, 영유아 가구에서 실제 체감하는 양육부담의 경감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도 갖게 될 것이다. 이제는 모든 육아정책에 있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국가는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경쟁심보다는 누구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